

광주 재건축·재개발 사업 잇단 소송에 '시끌'

조합-건설사 추가비용 다툼에 조합원들 입주도 못하고 발동동 조합 설립·추진 과정 갈등 소송도 광주 지역주택조합 70곳 달해 곳곳 사업 지연 우려 목소리



광주-전남 재건축·재개발 관련 갈등과 소송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한 재개발구역에서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조성 계획이 발표되고, 봄철 분양 시장도 기지개를 켜면서 잠잠했던 광주 주요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의 갈등·분쟁도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으로 내집을 장만하고도 입주를 하지 못한 시민들이 본격적 이사철을 앞두고 속앓이를 하는가 하면, 재건축·재개발조합 간부들 간 갈등·소송도 잇따르면서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에 설립된 70개 지역주택조합 상당수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건설사 간 이해 다툼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 설명이다.

◇몇 년 기다렸는데...조합·건설사 다툼으로 입주 못해=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지역주택조합(이하1층-17층·764세대) 조합원 중 절반이 넘는 44여세대는 입주 예정일(2020년 12월 31일)이 2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가 입주를 두 달 남짓 남겨놓고 조합측에 추가분담금(세대당 5500만~6000만)을 요구했는데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낼 수 없다며 거부하면서다. 건설사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273억64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고 건설 공사에도 96억3400만원이 더 투입됐으며 342억9800만원을 조합측에 요구했다.

건설사는 이후 추가 비용을 받기 전에는 입주할 수 없다며 막아섰고 주민들은 최근 광주지법에 쌍용건설을 상대로 '입주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7일 해당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달부터 예정된 입주에 맞춰 이사를 계획했

던 조합원들은 입주하지도 못하고 치솟는 전셋값에 그동안 살 집을 찾기도 쉽지 않아 발동동 구르고 있다.

조합원들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잘못 등을 들어 기존 조합 임원들을 갈아치웠는데 이들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날 광주지법에서 심문이 열렸다.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뒤늦게 입주를 2달도 남기지 않은채 총회에서 분담금 내역을 공개하고 내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속도 못 내는 주택 재개발...주민만 불편=광산구 대규모 재개발지역인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소송이 진행되는 등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다.

최근에는 재개발구역 내 한 필지에 2개의 물건을 소유한 조합원이 다수의 분양권을 요구했지만 한개의 분양권만 인정한다는 조합측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소송'까지 제기된 실정이다.

재개발 사업이 자치구로도 불똥이 튀는 경우도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장미아파트의 경우 원주민 26명이 조합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남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역 최대규모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소집일이다. 지난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 내부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10년 가까이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장기간 개발이 지연될수록 개발비가 상승하고 열악한 주

거환경에 대한 개선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영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도 사업 추진과 별개로 조합장 선임 결의를 놓고 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되는 등 내부 갈등이 이어지다 7개월 만에야 마무리 됐다.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은 "재건축·재개발 소송은 판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진다"면서 "여기에 사업 지연으로 생기는 손해에 부담을 느낀 조합원들이 조합의 결정을 반박하고 나선다면, 조합 측이 사업을 강행해도 결국엔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아니꼬우면 이직' 조롱글 LH 직원 찾기 수사 본격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과 관련,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등 조롱성 글을 올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찾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진주에 있는 LH 본사와 서울에 위치한 블라인드 앱 운영사인 '팀블라인드'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에는 사이버수사과 직원 각 5명씩 총 10명이 동원됐다.

지난 9일 직장인 익명게시판인 블라인드 앱에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려다' 등 글을 올리면서 공분을 샀다.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해당 회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작성자는 LH 직원일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받았다.

LH는 이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롱성 글의 작성자가 LH 직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체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질병 얻은 포스코 근로자 산업재해 인정 잇따라

포스코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질병을 얻은 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전날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

A씨는 약 35년간 두 제철소 화성부 선타계 수송반에서 근무했다.

화성부는 석탄을 고온에 쪼서 덩어리 형태 연료인 코크스로 만드는 부서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는 코크스오븐 공정의 석탄 수송, 소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크스 가스,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유해 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 "신청 질병과 업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정위원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코크스공장 선타계 수송반에서 근무한 B씨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B씨는 1980년 포스코에 입사해 29년간 근무하다가 2019년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석탄 분진과 각종 발암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폐섬유화증 원인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 등과 함께 포스코 직업성암 집단 산재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검찰, 기아차 취업사기 주범 징역 20년 구형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135억원 모두 추징해 달라" 재판부에 요청

기아자동차 취업사기와 관련, 구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챈 30대에 대해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에게 받아 갚긴 135억 3000만원을 모두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징금 5500만원을, 근

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징금 134억7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취업지원자 616명으로부터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131억원을 가로챈 등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범행으로 구속된 B목사에게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서기관에서 뇌물로 줄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고용노동부

의 기아차 지원금 심사가 통과되면 기아차에서 바로 채용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지원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속였다는 게 검찰의 공소 내용이다.

검찰은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은 취업보증금 명목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가 하면, 기아차 취업이라는 말에 속아 정상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면서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얼굴도 모르는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한다"면서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공사현장 토사 매몰 50대 근로자 숨져

17일 오전 8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연산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A(55)씨가 토사에 매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제조공장 건설 현장에 투입, 옹벽을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변을 당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